

2024년 11월 13일

KIWOOM Digital Asset Issu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자산리서치팀

| 디지털자산/원자재 심수빈 sb.shim@kiwoom.com

| 디지털자산 김현정 hyun.k@kiwoom.com

[#가상자산] 11. 미국 대선 결과와 디지털자산

• 트럼프 트레이드와 디지털자산 시장

- 트럼프가 당선 이후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 속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 강세
-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서비스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달러 패권을 위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도널드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내용은?

-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를 비판하며 친가상자산 정책 강조 '가상자산 규제완화, 비트코인 채굴 지원, 비트코인 국가 비축물 취급' 등이 이에 해당
- 향후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이 현실화되는지 여부에 관련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예상.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트럼프 트레이드와 디지털자산 시장

11월 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대선은 트럼프 당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이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졌고 금융시장도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해리스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시사하고, 투자자들이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높아졌던 대외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험했다는 점도 대선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시장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에 주목했다. 2024년 상반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고, 자산운용사들이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는 등 전통 금융기관들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선거 유세기간 동안 디지털자산의 성장에 긍정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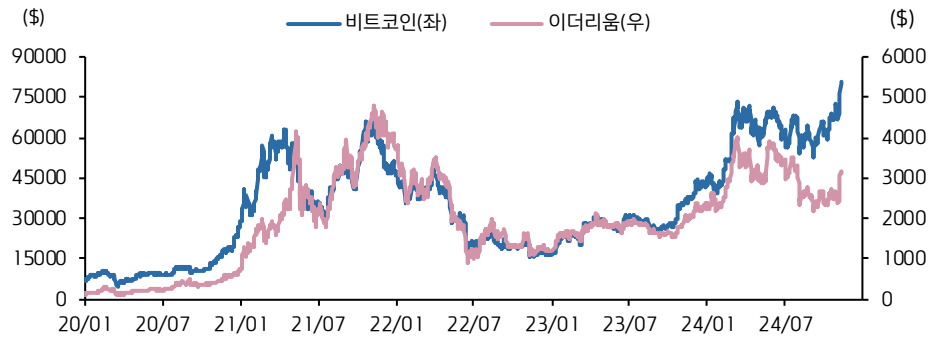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가상자산이 이번 미 대선의 주요 정책 포인트 중 하나로 언급되어온 가운데 사실 주요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코로나19 이후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22년부터 시작된 약 2년간의 암호화폐터 기간 동안 루나-테라, FTX 파산과 같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권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강해졌던 만큼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가상자산 규제안은 EU의 MiCA(Market in Crypto-Assets)다.

미국도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을 위한 법안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부터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시장을 규제하고자 했다. SEC는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유무를 판단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중앙화거래소, 가상자산 발행사 등에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이들을 제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미국의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에 적대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본인은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이에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관련 자산이 급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물론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주요 가상자산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리플은 해리스 지지를 표명하는 등 해리스 진영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해리스는 트럼프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던 만큼 트럼프의 당선시 가상자산에 더욱 호재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주요국 규제

국가	내용
유럽	<p>가상자산의 보관, 거래, 관리 등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인 MiCA(Market in Crypto-Asset)를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의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성을 위한 규제를 마련 -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선스 취득 및 제공자의 책임 명시, 가상자산 플랫폼 위험성 공개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확보 및 일일 거래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
영국	<p>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 영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법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는 2023년 2월 금융서비스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기존 금융서비스법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마련을 제안 -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적용 대상을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 제공되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
싱가포르	<p>가상자산 사업 및 거래 등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해결하고 시장에서 가상자산 사업 및 가상자산 플랫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별도 라이선스 취득 및 자금 세탁 의무조항을 규정한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MA)을 마련
일본	<p>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유리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정책을 시행하며 규제 강화를 해왔지만,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무 폐지, 가상자산 소득세율 경감 등을 제안하며 규제 완화 기초를 나타냄 - 금융청(FSA)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간소화 및 개선 조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web3 기술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 및 감독기관의 역할 관련 법안 내용

구분	내용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p>거래 참여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 따르면 송금 서비스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은 주 차원의 규제 및 허가를 받고 연방 차원의 자금세탁 방지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함.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 - 즉,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p>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거래위원회(CFTC)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으로 분류하며, 디지털 상품은 CFTC가 관리하고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SEC가 감독하는 것을 제안 -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 coins Act)에 따라 증권이 아니며, SEC와 CFTC가 규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함. 미 연준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하며 규제 기관의 권한을 유지 - 그리고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경제 모델, 개발 계획, 위험 요소 등의 공개 의무화. 중개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시장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CFTC에 입증해야 하며 특정 선물 협회에 등록할 의무 - 해당 법안은 각 기관에서 규제하는 가상자산 감독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가상자산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구축 및 개발을 촉진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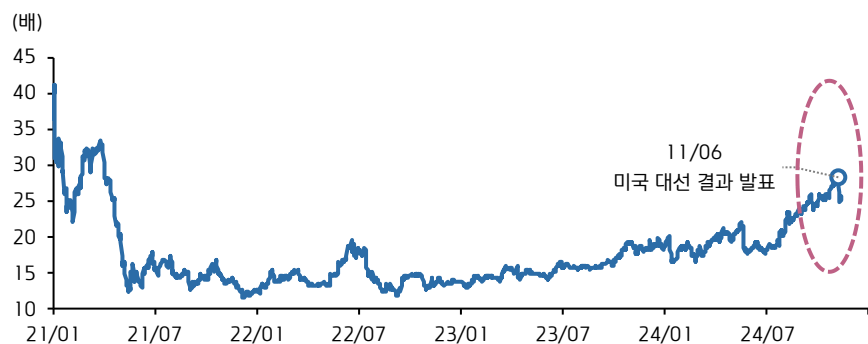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실제로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89,000선을 상회하며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다. 또한 현물 ETF 출시 이후 부진했던 이더리움은 \$30,000 선을 상회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로 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대선 이전까지 흐름이 부진했던 주요 알트코인까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한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는 이전에 보여준 모습과 매우 상반된다. 과거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번 보였다. 임기 중 페이스북(현 메타)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현 디엠)를 발표했을 때 트위터(현 X)를 통해 이를 비판했고, 임기 이후에도 비트코인에 대해 사기처럼 보인다고 평가하며 높은 강도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는 진짜 통화,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통화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과거 발언을 감안하면,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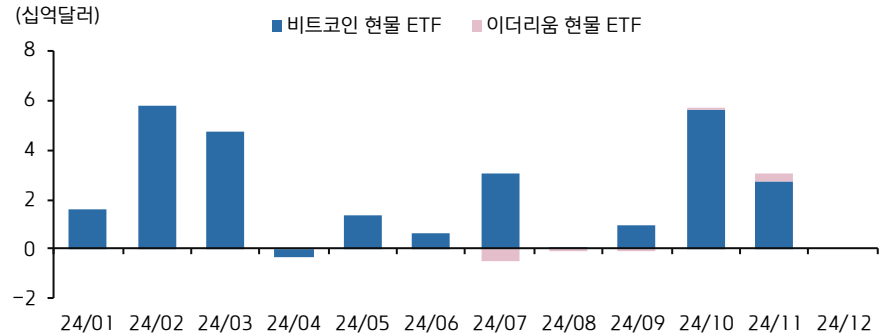
이에 현재 트럼프의 가상자산 시장에 친화적인 스탠스는 가상자산의 성장이 달러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추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이러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 기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현실화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변화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비트코인 현물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자본유출입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온 이유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정치 기부금 규모, 미국 성인들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통계 등이며 실제로 관련 통계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유권자들의 대한 높은 관심이 트럼프의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부수적인 이유일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트럼프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가상자산의 달러 대체 가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어도 가상자산의 성장이 달러 대체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스테이블 코인을 들 수 있다.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되며, USDT,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1의 교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화, 미국 채권 등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규모 변화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이를 고려하면, 가상자산 투자 수요 증가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난다면 이는 달러와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오히려 달러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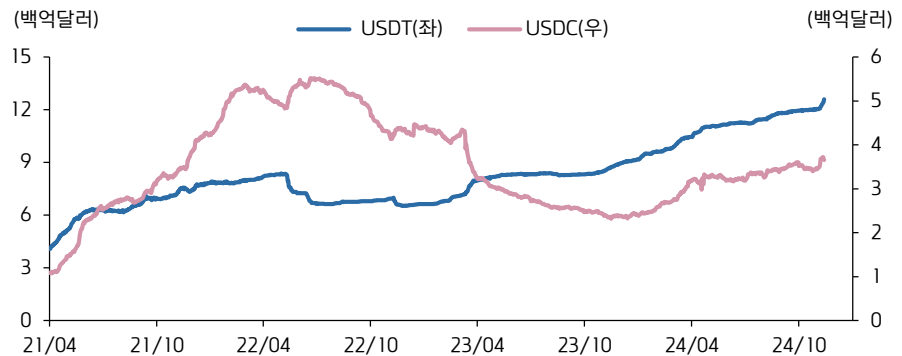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트럼프의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는 러시아에 대해 금융 제재에 나섰고,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서방국가와 비서방국가간 대립은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이다.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하거나 송금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출시되어온 가운데 중국과 사우디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소규모 업체들이 빠른 송금과 낮은 수수료를 이유로 USDT로 무역대금을 결제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국제결제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늘어난다면 서방 국가의 금융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과의 접점도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통 금융시장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기도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가상자산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소 상장, 상장사의 비트코인 투자도 관련 사례로 들 수 있다.

최근 금융시장 내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관련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달러 패권 유지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가상 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정책 스탠스를 내놓은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이에 트럼프가 언급했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상자산 특유의 대규모 변동성과 대선 이후 가격의 급등세를 고려했을 때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만,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은 비트코인 상승에서 시작되어왔다. 트럼프가 언급했던 공약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채굴에 긍정적인 환경 조성 등이 있었고, 이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비트코인 수의 증가 가능성, 반감기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USDT, USDC 시가총액



자료: DefiLlama,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도널드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내용은?

* 테라-루나 사건(22.05)

가상자산 테라와 그와 연동된 루나 코인이 가격 유지 알고리즘에 실패하며 단기간에 급격히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

* FTX 파산 사건(22.11)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와 부적절한 자금 거래와 고객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되며 파산한 사건. 당시 고객의 자산 인출이 중단되며 투자자 손실 발생.

* SAB121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회계 처리 지침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투기적인 자산으로 지칭하며 투자 유의를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시 국세청(IRS)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상자산 범죄 단속에도 집중하였다. 특히 임기중인 2022년 5월과 11월에는 각각 테라-루나 사건과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을 연이어 겪으면서 거래소에 기업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는 법안 마련을 의회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역시 대다수의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관련 주요 기업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 제기를 이어갔다. 해당 소송들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SEC의 가상자산 관련 기업 단속은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하여서도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였다. 일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굴 시 사용되는 모든 전기에 30%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러한 관세 정책은 추진되지는 못하였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올해 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변화가 감지되기도 하였으나, 지난 6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된 'SAB121 무효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기간(22.01~25.01) 내 가상자산 관련 언급

날짜	내용
21.04	- 바이든 대통령, 엘런 재무장관의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 내용 지지. 한편, 지난 1월 엘런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투기적인 자산"임을 강조
21.05	- 미 연방정부 1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거래 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조치
21.06	- 바이든, '부패 퇴치를 핵심 미국 국가 안보이익으로 확립하기 위한 각서'에 가상자산과 사이버 범죄 단속을 집중하는 내용 포함
21.11	- 미 백악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 강조. 의회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공개
22.03	- 바이든 행정부,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경우 국세청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포함
22.05	- 바이든 행정부, 의회에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과 기업 자산 분리 하는 법안 마련 요구
23.03	- 바이든 행정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에 30%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정책 추가
23.05	- 바이든, 트위터를 통해 부유한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세금 허점을 막고 싶다고 언급
24.03	- 바이든 행정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디지털 자산의 '워시트레이딩' 방지 규정, 가상자산 채굴 에너지 관세 등의 내용 추가
24.06	- 바이든, 금융 기업의 가상자산 보관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121)무효화 결의안 거부권 행사

자료: 언론사 정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워시트레이딩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서로 사고 팔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는 시장 조작의 한 형태

가상자산 규제 강화 정책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 전 트럼프 1기 행정부(17.01~21.01)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관련하여 트럼프는 첫번째 임기 당시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당시 임기 기간이었던 2019년에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리브라(Libra)'발행 계획에 대하여 은행법과 같은 엄격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에 대해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리브라 발행을 견제하는 내용의 소셜 계정 게시글에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좋아하지 않으며 가치 기반이 없는 불안정한 자산'이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11월에 치뤄진 47대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의 트럼프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시작부터 재선 공약이 담긴 '어젠다47 (Agenda47)'에 가상자산(Crypto) 산업에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본인을 가상자산 대통령(Crypto president)으로 지칭하며 적극적으로 친가상자산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 기간(17.01.20~21.01.20) 내 가상자산 관련 언급

날짜	내용
1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백악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검토 진행. 이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논란에 예의주시 하는 상황임을 강조 - 엘리언 존슨 의장, 비트코인 급등과 관련하여 '매우 투기적인 자산으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X' -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성 강조
1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 구축 돌입 -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본질적 가치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통화가 아님'
1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트위터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의 활성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높고 가치 기반이 부족하며 규제 망을 벗어나기 쉬워 불법 행위를 촉진한다"라고 언급 -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리브라(Libra) 발행에 대하여 은행업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 또한, '가상자산을 좋아하지 않으며 가치 기반이 없는 불안정한 자산'이라며 강하게 비판 - 미국 재무부,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련 트위터 글 게시 직후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등의 불법 활동에서 사용'된다는 부정적으로 언급

자료: 언론사 정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Agenda 47 가상자산 관련 언급 부분

5. Champion Innovation

Republicans will pave the way for future Economic Greatness by leading the World in Emerging Industries.

Crypto

Republicans will end Democrats' unlawful and unAmerican Crypto crackdown and oppose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We will defend the right to mine Bitcoin, and ensure every American has the right to self-custody of their Digital Assets, and transact free from Government Surveillance and Control.

자료: donalddjtrump.com

이번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모금행사 및 비트코인 2024컨퍼런스에서의 연설 등을 통해 집권 시 추진할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본 트럼프의 가상자산 정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 완화, 가상자산 채굴 지원, 비트코인 전략적 국가 비축물(national stockpile)로의 취급을 꼽아 볼 수 있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반영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기대된다. 이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 당시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해임을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증권법을 이용하여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단, 트럼프 역시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한 자유 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며 특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제재 보다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생태계를 고려한 규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럼프는 "남은 비트코인이 모두 미국에서 채굴 되길 바란다."라고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만큼 채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미 지난 6월 트럼프는 미국 내 채굴 기업인 '클린스파크', '라이엇플랫폼' 등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채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채굴 시 소모되는 에너지에 30%의 관세를 부여하는 정책과 상반된다. 따라서 채굴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이용 강화, 관세 정책 등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련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채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 중에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내용은 '비트코인 전략적 국가 비축물(national stockpile) 취급'이다. 지난 7월 트럼프는 '비트코인 2024컨퍼런스'에서 기초연설을 진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물'로서 취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시 연설에서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면서, 당선 시 정부가 이미 가지고있거나 미래에 획득할 비트코인을 모두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연방정부가 5년내 비트코인 100만개를 비축하는 법안(S.4912 - BITCOIN Act)의 내용을 공개하며, 연설에 힘을 보태었다.

현재 루미스 의원의 법안은 상원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추진까지는 상·하원 과반 찬성,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연준이 보유한 금 증서를 현재 시장 가치로 재평가하여 발생하는 차액으로 매년 2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을 계획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추진 시에는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선 결과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 중 다수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해당 정책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아직 트럼프 2기 내각 인사가 확정되지 않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 현실화와 추진 속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 SEC를 비롯한 주요 기관 수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들이 발탁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점차 전해지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9만 달러를 터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트럼프 2기 내각 구성 전까지 시장에는 친가상자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각 구성 이후 점차 정책 현실화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

47대 대통령 대선 과정 중 트럼프의 가상자산 관련 언급과 비트코인 가격 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언론사 정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가상자산 관련 정책 비교

바이든 행정부	분류	트럼프 2기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적 자산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 강화 필요 -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이용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경계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산업에 친화적인 접근 -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의 가상자산 규제 관할권 인정 -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세금 부과 및 미국 국세청의 투자자 거래내역 접근 허용 -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 SAB121무효화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정책 및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선 공약(Trump Agenda47)에 가상자산(crypto) 언급 - 규제 완화 및 관련 산업 진흥, SEC 위원장 해고, 비트코인 국가 비축물(national stockpile) 취급 가능성 시사 - 가상자산 생태계를 고려한 미국 내 법적 틀 마련 필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시장 확대 인정 -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명확한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조 	가상자산에 대한 소속 정당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금융 활동 보장 강조 - 가상자산 관련 최소한의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트코인 채굴 시 소모되는 전기에 대하여 30% 과세 부과 정책 추진 	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 라이엇플랫폼, 클린스파크 등 미국 채굴 기업과의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투기적인 자산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음" - 가상자산 채굴 및 거래 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됨 	가상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대통령(crypto president) - 가상자산은 미국 내에서 채굴되어야 함(Made in USA) - 가상자산업계가 번창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법적 틀이 중요하며 특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 연구 및 개발 추진 	CB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DC 반대, 기존 정부의 CBDC 관련 정책 전면 폐기 언급

자료: 언론사 정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